

# 코로나 넘어 미래 동력 확보...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회복이 더딘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기업이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은 세액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세 흐름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층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훙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개 방향으로 나뉜다.

훙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과 안전한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초집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훙 부총리는 "정부 역량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지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생과 직결된 세제개

## 세제발전심의회서 의결

- 국가전략기술 R&D 공제 10%p ↑ · 시설투자 6~16% 연매출 8천 이하 생계형 창업, 50~100% 세액 감면
- 청년층 집중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확대
- 고액채납자 가상자산 압류...납부지연 가산세 손질
- 대·중소기업·서민층 세부담 줄고, 고소득자 늘어

편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국세 13개와 관세 3개 등 총 16개 개정대상 법률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R&D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는 당기분에 대해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8%의 세액 공제율을, 증가분은 모든 기업에 4%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층별로 필요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거나 연장한다.

폐업한 중소기업이 재기하면 최대 3년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 압류·매각을 유예하고 있다. 이 혜택을 직접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생긴 손실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도 직접 과세연도(2019·2020년) 납부 세액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도 확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우대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인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한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취약계층 취업



훙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확대되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해 일자리 회복력을 강화한다.

기존에 받던 세액공제 혜택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도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줄어들면 그 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 복귀를 돕는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직급 이자소득 비과세도 새

로 추진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새로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는 국제거래, 가상자산, 해외부동산 등을 중점 관리하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해 완화한다.

특정 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 제도 세부담을 관점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외국법인이 연차사무소를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세부담 회피를 막고,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고액·상습채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를 압류해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과세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도 이뤄진다. 몰가·소득수준을 반영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13년 만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인하한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감소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1600억원),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TC) 확대(-2000억원) 등의 감소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2년 1조2579조 원 감소, 2023년 1901억원 감소, 2024년 2000억원 감소, 2025년 1939억원 감소 등이다. 2026년 이후에는 17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세부담이 늘었던 것과 달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대기업 세부담이 8689억원 줄어든다. 중소기업(-3086억원)과 서민·중산층(-3295억원)도 감소한다. 반면 고소득자는 소득이긴 하지만 50억원 늘어나며 부자 증세 기조가 이어진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빼면 대기업은 161억원 세부담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하게 된다"며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민주화 선도지 정체성 회복

### 국주영은 도의원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 전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190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전국 최초 시위,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계엄포고에 대한 반대시위 등이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선도지이다.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나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의 민주열사들이 바로 전북도 출신이다.

국주 의원은 "전북도가 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특정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념사업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현행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단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도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주화운동의 선도지인 전북도가 자긍심을 갖고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지투기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 2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불법 부동산투기를 영위하는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투기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함께 통과된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우원식·김윤덕 의원 대권 도전 이재명 지지 호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혀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4선·서울 노원구) 의원은 26일 전북을 방문, "대한민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적임자는 이재명 지사"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김제 금산사에서 거행된 월주님 영결식에 참석한 후 김윤덕(전주시장)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적 시기다. 기후위기,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전환적 성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이를 이끌어 낼 추진력을 갖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민들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 "공정·평등·균형발전의 책임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 오른쪽)과 김윤덕 의원이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또,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지역간 불균형을 꼽았다. 이어 그는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부에 있던 공공기관을 북쪽으로 옮기면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풀어냈다"며 "전북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

뤄낸 이 지사가 전북의 문제를 풀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지사는 미래에 대한민국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준비해서 발표하고 있다"면서 "중소정책과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차츰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이 지사가 리드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는 이미 준비돼 있고 미래를 향한 성과를 냈다. 이것이 이 지사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군산 지원법' 2건 본회의 통과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



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인 '지역 산업유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돼 대안으로 통과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 국힘 정운천 의원,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광 물류센터 사고



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라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